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능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10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운동본부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1년 반을 경과하는 범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 300건 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합니다. 사고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9개월이나 됩니다.
- 검찰의 수사 지휘, 솜방망이 구형도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제강을 제외한 온유파트너스, 시너시건설 대표는 모두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심지어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능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 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대구/경북, 경남 등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2.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 부장

내용	발언자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소극적 수사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 금속노조 손덕현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공공기관, 지자체 기소 0건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민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고 개악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서명 전달	- 기자회견 참가자

### 3. 기자회견문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참혹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긴 2만 명의 검찰 규탄 서명지를 제출한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8%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 9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의 느장 수사, 기소 지연은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또 죽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동안 같은 기업에서 5건의 중대재해로 6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갔다.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철도공사 4건, 현대비엔지스틸.계룡건설 3건, SK에코플랜트.에쓰오일.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반복되었다.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이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소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조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결국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가물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한 번 지탄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3건 중 한국제강과 시너지건설은 이전의 중대재해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모두 2년이었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형 기준이 상향되고,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을 2년 6개월에서 4년 징역형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한 것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 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누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는 전국 곳곳에서 20,67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 누장 기소 솜방망이 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 재벌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신속하게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25일

민주노총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붙임 자료]

1. 중대재해 및 수사·기소 현황

1. 사고사망자 현황 및 조사 대상 재해 현황

1) 2022년 사고사망자 현황 및 조사 대상 재해 현황

<표 1> 2022년~2023년 1분기 사고 사망자 및 건수, 조사 대상 재해 건수

구분	년도	사고 사망 (명)	조사 대상 재해(건) <sup>1)</sup>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22		611	381	230	328	224	104	163	82	81	120	75	45
	'23 1분기		124	76	48	63	34	29	30	22	8	31	20	11
사망자수(명)	'22	874	644	388	256	341	226	115	171	82	89	132	80	52
	'23 1분기	201	128	79	49	65	36	29	31	22	9	32	21	11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 이후 사고사망자 현황 및 조사 대상 재해 현황

<표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2023년 1분기 사고 사망자 및 건수, 조사 대상 재해 건수

구분	년도	사고 사망 (명)	조사 대상 재해(건)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22 중처벌 이후		568	358	210	308	213	95	146	74	72	114	71	43
	'23 1분기		124	76	48	63	34	29	30	22	8	31	20	11
사망자수(명)	'22 중처벌 이후		596	365	231	316	215	101	154	74	80	126	76	50
	'23 1분기	201	128	79	49	65	36	29	31	22	9	32	21	11

1) 조사 대상 재해: 산업재해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제1항(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사망 발생 건 및 사망자 수이며,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사건임.

## 2. 사고사망자 기소 건수

### 1) 2022년

- 20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며 그 중에 노동부가 조사 대상 재해로 공표한 재해는 611건(644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230건(256명)이며 그중에 송치는 34건(2023년 1월 기준)이며 기소는 11건으로 확인됨.
- 사건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9개월 소요<sup>2)</sup>

### 2) 2023년 1분기

- 2023년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201명이며, 그 중 조사 대상 사망 재해는 124건(128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48건(49명)임.

### 3) 2022년~2023년 1분기 전체 재해조사율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

- 2022년~2023년 1분기 전체 사망재해 1,075건 중 조사 대상 사망 재해 68.4%(735건)
- 조사대상 사망 재해 735건 중 2.9%(21건) 기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중 6.8%(21건) 기소

<표 3> 2022년~2023년 1분기 조사 대상 사망 재해 건수 및 기소 건수

구분	사고 사망자(명)	조사 대상 사망 재해(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건)	송치(건)	기소(건)
'22	874	611	230	34	11
'23 1분기	201	124	48	미확인	10
합계	1075	735	278	미확인	21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23.01.23)



[그림 ] 22년~23년 1분기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 및 기소 건수

### 3. 기소 사건 현황

<표 4>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현황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연월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	재판 상황
1	(주)삼0000	2022-01-29	2022-06-13	2023-03-31 의정부지검 그룹 회장 기소	
2	평000(주)	2022-02-09	2022-10-27	2023-02-14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표이사 기소	
3	두000(주)	2022-02-16	2022-04-11	2022-06-27 창원지검 대표이사 기소	
4	삼000(주)	2022-02-19	2022-05-31	2022-11-31 창원지검 통영지청 대표이사 기소	
5	제000(주)	2022-02-23	2022-09-19	2022-12-30 제주지검 대표이사 기소	
6	(주)태0000	2022-02-26	2022-07-26	2022-12-29 춘천지검 대표이사 기소	
7	(주)우0000	2022-02-24	2022-05-23	2023-06-05 청주지검 대표이사 기소	
8	건000(주)	2022-03-09	2022-05-31	2022-11-3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표이사 기소	
9	(주)시0000	2022-03-16	2022-05-11	2022-12-29 인천지검 시공사 대표이사	2023-06-23 인천지법 법원 1심 선고 시너지건설 대표 징역 1년 , 집행 유예 3년 선고 시너지건설 법인 벌금 5천만원 선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연월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	재판 상황
					고 2023-07-03 인천지검 항소
10	한000(주)	2022-03-16	2022-05-17	2022-11-03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표이사 기소	2023-04-26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선 고, 법정 구속 한국제강 법인 벌금 1억원 선고  2023-07-12 한국제강 항소로 인해 항소심 진 행  8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11	성000(주)	2022-03-25	2022-11-03	2023-05-08 부산지검 대표이사 기소	
12	(주)제0000	2022-03-25	2022-08-04	2023-06-02 서울중앙지검 대표이사 기소	
13	(주)엘0000	2022-03-29	2022-05-06	2022-10-19 대구지검 대표이사 기소	
14	국000(주)	2022-04-15		2023-06-14 서울북부지검 대표이사 기소	
15	현000(주)	2022-04-20		2023-05-22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표이사 기소	
16	(주)온0000	2022-05-14	2022-06-29	2022-12-2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표이사 기소	2023-04-0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원청 법인 벌금 3천만원 선고  2023-04-16 온유파트너스 대표, 검찰 둘다 항 소 포기하면서 1심형 확정
17	만000(주)	2022-05-19	2022-08-25	2022-12-29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표이사 기소	
18	(주)신0000	2022-05-26		2023-05-08 울산지검 업체 대표 기소	
19	(주)홍0000	2022-06-08	2022-12-06	2023-03-17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표이사 기소	
20	(주)엠000	2022-07-14		2022-12-27 울산지검 대표이사 기소	
21	(주)동0000	2022-03-08		2023-07-21 대전지검 원청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이사 기소	

\*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날짜는 의원실 제출 자료 등에서 확인된 내용만 표기

## [발언문]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건설자본의 사주와 정권 지지율 상승을 위해  
건설노동자, 건설노조를 때려잡는데는  
단 200일만에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하듯이 이 잡듯이 조사,  
영장도 없이 건설사의 각종 자료를 억박지르며, 가져갔던 경찰!

각종 사무실과 수백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압적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영장을 청구하며, 130여  
명을 구속시키고, 수백명을 기소, 수천명을 수사하며, 급기야 조합원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  
들기 위해 활동했던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경찰과 검찰!

관심법까지 써가며 정말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정말 잘난 이 검찰, 경찰 공화국에서

그런데, 정작 건설현장에서 그 원인이 너무나도 단순/명백한 사고로  
떨어져죽고, 깔려죽고, 끼어서죽고, 맞아서죽고, 폭발과 화염에 타죽어간  
건설노동자 수백명의 죽음을 수사하고, 피의자인 건설사 책임자를 기소하는데는  
어쩌면 그렇게 그 탁월한 능력이 감쪽같이 사라져  
검찰의 기소에만 평균 9개월이 걸리는지?  
또한, 1심 판결에서 피의자와 검찰이 싸고 치는 고스톱을 치듯  
함께 항소를 포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한 해에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이판사판 죽음의 건설현장, 타살현장에 대한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하며,  
정권과 여당, 자본들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을 통해 무력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경찰/검찰  
은 맞짱구를 쳐주고 있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 도급순위 2위, “E-편한세상”이라는 고급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는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6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갔지만, 경찰/검찰의 그 대단한 전방위적 수  
사/압수수색/영장청구/기소 능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16개월째 어제도 “수사중”, 오늘도 “수사중”이며,  
내일도 “수사중” 일 것입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건설자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에는  
한 없이 관대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을 온전히 바꿔내기 위해 투쟁해 온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는 온갖 사  
실 왜곡과 혐오, 조작, 온갖 억측을 끼워맞춘 황당한 법 적용, 건설노동자에 대한 폄하까지 일삼으며, 즉각  
적인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맞서 더욱 투쟁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 청년이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 많은 건설노동자를 조직하고, 더욱 투쟁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민변 손익찬 변호사

팬대를 잘못 굴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 단체  
교섭을 했는데,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건폭’이라고 부르고, 1계급 특진 50명을 걸어서 인간 사냥을 시켰습  
니다. 정말 폭력을 저질렀으면 폭행죄나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만들어서 강

요죄, 공갈죄로 괴롭힙니다.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괴롭히니까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펜대를 아예 굴리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13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소된 사건 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4건이나 해당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잘못이 고쳐지겠습니까? 이 잘못이 고쳐지지 않으면, 노동현장에서는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이 펜대를 굴리지 않고 있는 검찰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어나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봐주기를 중단하고, 수사과 기소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공범입니다.